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우치로 상가 건물들에 복구의 행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해당 상가가 들어선 우치로 일대는 지난 17일 426mm 폭우로 침수된 곳이다. /뉴스시스

‘426mm 폭우’ 피해 상인들, “우수관 예산 어디로” 현수막 시위

상인들 “주변 재개발·우수관로 설계 소홀했다” 주장
북구 “상가 오해...상습침수구간·우수관로 용량 초과”

‘426mm’ 기록적 폭우로 광주 북구청 주변에서 수해를 입은 상인들이 행정기관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상인들은 북구가 주변 재개발에 따른 배수관로 점검과 같은 경고를 무시해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는 한편, 북구는 상인들이 현수막을 통해 오해 섞인 주장을 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4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북구청 앞 우치로 주변 일부 상가에 북구청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반복된 홍수 피해, 짝박 망했다’ ‘무대책 북구청, 우수관 예산 어디로’ ‘양수기도 선풍기’ ‘북구청장 그동안 뭐했다’ 등 비판성 글이 적혀있다.

현수막은 지난 17일 광주지역에 쏟아진 426mm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건물주들이 내걸었다. 우치로 일대는 당시 쏟아진 폭우로 하수관 등이 역류하면서 홍수가 발생, 1층·지하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수막을 내건 상가 건물주 A씨는 지난 10년 사이 우치로가 침수될 만큼 비가 온 적이 3번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과 2020년, 올해 등이다.

그간 진행돼온 주변 재개발로 빗물을 가두는 녹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들어서면서 빗물이 지표면을 타고 흐르게 됐다고도 했다.

흡수되지 않은 빗물이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우치로 일대로 고이면서 침수 피해가 극대화, 여기에 재개발 과정에서 우수관로 설계가 소홀한 탓에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당시만해도 시간당 40mm 강수량은 거론했다. 재개발이 진행중이던 2020년부터는 하수관이 역류, 흙탕물이 넘치면서 감당할수가 없었다. 올해는 어땠겠는가. 이미 역대 피해를 입었다”라며 “북구를 향해 재개발 과정에서 우수관로를 점검해달라고 충분히 경고했다. 오늘

날 폭우 속 침수 반복이 자연재난이면서도 사회적 재난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비판했다.

북구는 상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치로 일대가 서방전을 복개한 도로인 탓에 상습침수구역일 수밖에 없다는 점, 2020년 침수 이후 국비를 확보하고 현재 빗물저장시설 설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우치로 침수는 우수관로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온 탓에 벌어진 일이다. 우수관로 용량 설계 빈도는 30년 수준”이라며 “현재 빗물저장시설 사업도 진행 중이다. 동강대에 부지를 사들였고 준공되면 우치로 일대 침수가 확연히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로 인한 일대 빗물 지표면 투습 여부는 추후 확인해 볼 부분이다. 선불리 침수와 연결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재 하수도 정비 공사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 중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서둘러 마무리지어 불안해하는 주민들

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시, 버려지는 지하수 생태회복 재할용 ‘1석3조’

유출 지하수 탓에 하수도 요금 폭탄, 민·관 협력으로 해결
시공사 배출관로 설치·하천정화 행정지원·수질 개선 기여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유출 지하수 문제를 민·기업이 협력해 고충 민원 해결과 함께 수자원 재활용의 길을 동시에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생활밀착형 적극행정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유출 지하수는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 행위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하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하수(下水)에 해당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북구 각화동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공사 도중 지하수가 솟구쳤다. 하루 1100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유출됐다.

그러나 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월 1340만원에 이르는 하수도 요금도 입주민들에게 부과됐고 지하수를 사용하지도 않은 주민들 입장에선 황당할 따름이었다.

자연스레 민원이 잇따랐고 “그럴만하다”고 판단한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와 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고충민

원 조정 회의에서 유출 지하수를 하수도 아닌 서방천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사가 방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광주시는 하천 방류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지하수의 공공하수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매월 1340만원 가량의 하수도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

주민 고충민원 해결뿐 아니라 깨끗한 지하수의 서방천 유입으로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광주시는 유출지하수 활용사례를 올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접목, 국비 9억9600만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정용수·정수용수·소방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급수전 설치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홍 물관리정책과장은 “민·관·기업이 손잡고 고충민원을 합력적으로 해결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전환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 연내 재개항 불투명... 유족 “원인 규명 선행돼야”

서남권 관문공항인 무안공항이 제주항공 참사의 아픔을 딛고 언제쯤 재도약할지 관심이 쏠린다.

할주로 연장은 물론 각종 안전시설 설치·보완으로 폐쇄(NOTAM) 기간이 늘어나는 점,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완벽한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뜻을 고려하면 올해 내 개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해 12·29 참사 이후 3개월(1월·4월·7월) 단위로 무안공항 폐쇄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이다.

국토부는 연장된 폐쇄기간 공항 시설 전반의 안전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참사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은 유가족과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철거 및 교체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을 비롯해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공사를 추진 중이다. 콘크리트 둔덕을 모두 철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 일정·유가족 협의 고려하면 해 넘길 듯
“모든 사안 종합 고려, 재개항 시점 결정”

기존 199m 수준이었던 종단안전구역은 올 하반기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에 맞춰 할주로 양끝 240m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2800m 길이의 할주로를 3160m로 연장하는 사업도 올해 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조류충돌을 최소화 할 대책으로는 올 하반기 전국 공항 중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설치한다. 열화상카메라·음파발생기 등 추가장비가 8월까지 도입되며, 조류 대응 전담인력도 기존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이·착륙절차 개선 작업도 10~12월 말은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반방향 정밀접근절차 사용을 목표로 항행안전시설의 신호 안정성을 점검하고 비행감사·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시설 개선·보완 공사 진척도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의 일정을 비롯해 재개항에 앞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및 이에 대한 행정·형사적 조치 선행, 공항 위험 시설에 대한

완벽한 개선·보완 등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의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내 재개항은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가족 협의회 관계자는 “무안공항 재개항에 앞서 최소한 사고원인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형사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확실하게 적용한 뒤 재개항해야 한다”며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완벽히 보완·조치한 뒤 재개항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남도는 신속한 개항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사·도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 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하루속히 운항을 재개해 달라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족과의 원만한 협의, 각종 시설 공사 진행 상황, 행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행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족과의 원만한 협의, 각종 시설 공사 진행 상황, 행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행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 그리고 힐링
함께라서 더 좋은 치유

할인 EVENT!

위 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100
Tel. 061) 550-7675~6 / 인터넷(홈페이지) 예약 필수

프로그램	기본 ①	기본 ②	디럭스	프리미엄	전문 수증 재활
	대인 36,000원 소인 26,000원	대인 28,000원 소인 22,000원	대인 80,000원	대인 125,000원	1:1 90,000원 2:1 70,000원

가족(3인 이상) 30%
단체(10 이상) 20%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

QR Code

* 안전상의 이유로 36개월 미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